

'20대 폼페이' 논란에 與 지도부 사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20대 폼페이' 구설에 오른 것과 관련해 당 지도부가 25일 공식 사과했다. 청년층이 3·1운동 등 근현대사에서 맡은 역할을 강조하는 발언도 내놨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대 청년과 관련해 우리 당 의원들의 발언이 논란이 됐다"며 "원내대표로서 깊은 유감과 함께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20대 청년과 관련해 우리 당 의원들의 발언이 논란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대 청년은 미래를 책임질 주역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우리 사회도 미래가 있다"며 "지금 20대는 구조화된 불평등, 미래 불확실성에 짓눌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밀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대기업과 공공부문 취직, 부모 세대 성취에 따라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기회의 상실, 열심히 살아도 넓어질 수 없는 기득권의 세상에서 젊은이들이 절망하고 있다"면서 "젊은 세대의 상상력과 활개를 짓누르는 상명하복 문화에 슬 타쳐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근 이코노미스트는 밀레니얼 소셜리즘(Millennial socialism)이 새롭게 유행하고 있다고

홍영표 "원내대표로서 깊은 유감, 머리 숙여 사죄"

이해찬 "근현대사 헤쳐 온 힘, 청년 정신에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 내 취지 몰라...동의 안해" 반발

했다 미국 밀레니얼 세대(1981년부터 1996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 51%가 사회주의를 지지한다고 했다"며 "불평등 심화에 국민들이 재분배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 청년이 느낄 절망감 또한 세계 다른 젊은이들과 다르지 않으니라 생각한다"며 "20대의 현실 인식과 절망감에 대해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안타깝고 미안하다"고 전했다.

또 "청춘이라는 말이 절망과 상실의 동의어가 되서는 안 된다. 20대와 청춘은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레는 말이자 빛나는 이상과 희망을 꿈꿀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당정이 20대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함께 공감하고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해찬 대표도 청년의 역할을 강조했다. 최근 논란을 직접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20대 폼페이 논란을 일정부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최고위에서 "3·1혁명에는 당시 한민족의 10분의 1이 넘는 20

만 명이 참여해 일제 침탈의 부당함을 전 세계에 알렸다. 민족해방운동의 선구적인 사건이자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국제 전환을 이룬 대혁명"이라며 "근현대사의 집국을 헤쳐 나온 위대한 힘은 청년정신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유관순 열사는 18살 학생이었다. 백범 김구선생도 18세 나이에 동학 운동에 참여했다"며 "1919년 파리 강화회의에 김구식을 특사로 보내고 3·1운동 기폭제가 된 신한청년당은 20대 독립운동가 주축이었다. 이후 4·19, 5·16, 6월 항쟁, 촛불항쟁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20대 관련 발언이 논란에 휘말렸다. 설훈 의원은 지난 21일 폴리뉴스와 인터뷰에서 20대 남성의 민주당 지지율 하락 배경을 질문 받고 "이분들이 학교 교육을 받았을 때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다. 그때 제대로 된 교육이 됐을까"라고 말해 구설에 올랐다.

홍익표 의원은 15일 국회 토론회에서 "왜 20대가 가장 보수적일까. (지난 정권에서) 1960~70년대 박정희 시대를 발발하게 하는 반공 교육으로 아이들에게 적대감을 심어줬기 때문"이라고 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설 의원은 22일 "모든 책임은 열악한 교육환경을 만든 나를 포함해 여야 정치권과 기성세대에 있는 것"이라고 사과했지만 야당은 민주당에 제명을 요구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홍 원내대표의 최고위 발언은 두 의원과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설 의원은 최고위에서는 본인 논란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추가 발언이 논란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홍 원내대표가 내 발언의 취지를 잘 모르고 한 말 같다. 홍 원내대표의 사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국민에 대한 평화 인권교육, 민주주의 교육이 극우세력 준동에 상당한 영향을 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발언의 의도"라고도 했다. 이어 해당 발언을 최초 보도한 방송사에는 "별도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별 기자회견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전대 앞두고 고별 기자회견... "인적쇄신 힘들어"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의 우경화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이제 그렇게 허약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고별 기자회견에서 "(한국당은)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고 많은 것을 고쳐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당에 새 지도부가 들어와도 어쩔 수 없이, 하다못해 외부 압력이나 국민의 기대에 의해서라도 변화를 큰 작은 계속 해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많은 분들이 한국당이 다시 역행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했는데 잠시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프처럼 굴곡이 있을지언정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방향으로 반드시 간다고 생각한다"고 확신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전당대회만 해도 많은 분들이 과거의 프레임으로 후보들을 해석하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한다"며 "자유한국당은 그 지도자든 과거의 눈과 프레임으로만 보지 말고,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봐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스스로 뭐가 잘못됐는지를 당원과 의원들이 한다. 그리고 과거의 그 자리로 돌아가선 안 된다"는 것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굉장한 고통도 겪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 굴곡은 있을지언정 올라가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해 7월 비대위원장에 취임한 김 위원장은 그간 활동에 대해 "(주변에서) 제가 못 버티거나 쫓겨나거나 돌 중 하나일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7개월 간을 이렇게 왔다"며 "지난 세월에 대한 반성으로 인적쇄신을 단행했고, 새로운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당협위원장 선발 오디션 활용 등 당 운영을 투명하게 하는 한편 일반당원의 권리를 확대하는 실험을 했다"고 자평했다.

비대위원장 재임 중 가장 힘든 점으로는 "인적 쇄신과 조강특위 구성"이라며 "박원순은 5·18과 미북정상회담에 따른 후보들의 보이콧 문제가 힘든 일 중 하나였다"고 꼽았다. 김 위원장은 "조강특위를 구성할 때 당내에서 여러 의견들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어 비대위원장을 그만둘 수 있었구나 하는 정도로 엄청난 힘든 일이었다"면서 "전원칙 변호사 건은 제가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큰 일이 아니었다"고 했다.

또 "제가 중요한 후보들이 되도록 (전당대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어차피 한 분이 나오는 이상 전대가 전대 같이 되기 위해선 다른 분이 카운터파트너로 나와야 한다는 생각으로 후보 몇 분을 설득하는 과정이 힘들었다"며 "5·18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 당이 완전히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비대위에 오는 충격이 상당히 클 수 있다는 고민도 했다"고 털어놨다.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저를 변화시키기 위한 길을 가고자 한다"며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무엇이 부족했는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배우고 고치겠다"고만 밝혔다.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탄핵 논란에 대해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말씀을 되도록 안 하려고 한다"며 "이 문제는 당 밖에서 학자들이나 언론인들이 먼저 평가를 해주시고 그것이 서서히 당안으로 들어와서 준중하고 되는 게 순서상 맞다고 본다"고 답했다.

당 지도부의 5·18시대 대응이 늦은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절차를 존중하고 절차를 지켰다"며 "저 같은 스타일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즉각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바로 집행하기보다는 관계된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가능한 조율 해보려고 노력한다. 그러다보면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설명했다.

국민 62%, '임시정부 수립' 4월11일 임시 공휴일 찬성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인 4월1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이 임시 공휴일 지정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22일 C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에게 임시정부 수립일의 임시 공휴일 지정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 응답이 62.2%(매우 찬성 39.0%, 찬성하는 편 22.6%)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반대는 27.8%(매우 반대 12.2%, 반대하는 편 15.6%), '모름·무응답'은 10.0%다.

리얼미터는 "모든 지역·연령·직업 및 대부분 계층에서 찬성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다"며 "특히 30대, 사무직,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지지층, 진보층에서 찬성여론이 70% 이상이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지정 반대가 과반수(53.8%)를 차지했고 보수층은 찬·반(43.5% vs 47.3%)의견이 팽팽했다.

여야5당, 북미회담 성공기원 "한반도 평화정착 이정표"



문화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실에서 열린 회동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여야는 25일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고 지지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

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문화상 국회 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27~28

일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제2차 북·미, 미·북 정상회담의 순조로운 준비를 환영하며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국제사회와 함께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정상회담은 굳건한 한·미 동맹에 기반해 진행돼야 하며 향후 주변국과의 공조도 강화해 나가야 함을 전명한다"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는 2차 북·미, 미·북 정상회담 결과물에 주의하며 이후 상황에 초당적으로 대처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야호센터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사일로 340번안길 5

광산구